

SOC예산 매년 줄어 도내 건설업계 휘청

내년 예산에 3조3,775억 반영
2015년比 3년 새 16.4% 급감
올림픽사업 완료 공사량 감소
정부 매년 6% 축소 예고기도
“전망 깜깜 다각적 논의해야”

해마다 감축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도내 건설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9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올해 도내 SOC 예산은 3조3,775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3조4,143억원보다 1.1% 감소하고 2015년 4조395억원과 비교해 무려 16.4%나 적은 액수다.

건설협회 도회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완공,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대규모 공사 물량 감소를 원인으로 꼽아왔다.

내년 SOC 예산을 대폭 감축한다

는 정부의 예고로 도내 건설업계의 고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6%씩 SOC 예산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질 경우, 내년도 예산은 3조1,748억원으로 2013년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유가 추세에 의한 해외사업 투자 비중 감소와 최근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이 더욱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회는 내년 SOC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수주전략을 재검토하는 등 악재 돌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줄어드는 SOC 예산으로 도내 건설업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악재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재규기자

건설 빠진 일자리 정책, 방향 잘못 잡았다

지방 SOC 12兆 감소... 일자리 18만개 증발

(2010~2015년)

건설연, 예산 감축 부작용 지적
수송·교통예산 투입 부족으로
평균 출퇴근 시간도 3.4분 증가

최근 5년간 지방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12조원 넘게 감소했고 이로 인해 18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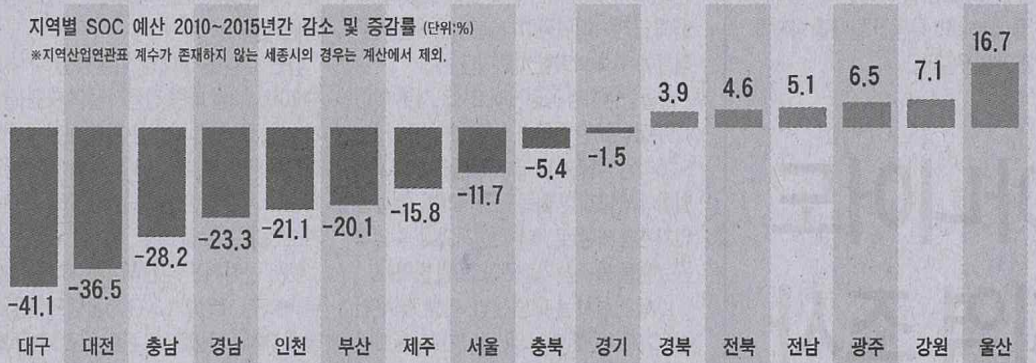
중앙정부의 SOC 예산 감축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과급력이 큰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지역 SOC 예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의 SOC 예산은 2010년 이후 5년 동안 총 12조6000억원이나 감소했다. 2011년에 3조3900억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2015년에도 2조7600억원이나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조3000억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부산(-2조7000억원), 경기(-2조1000억원), 경남

지역별 SOC 예산 2010~2015년간 감소 및 증감률 (단위:%)
*지역산업연표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세종시의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



(-1조9000억원) 순이었다. 강원(5000억원)과 경북(4000억원), 울산(3000억원), 전북(3000억원) 등 일부 SOC 예산이 늘어난 곳도 상승폭은 적었다.

지역 SOC 예산 감소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SOC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서울에서만 5년간 4만33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7만8000개의 고용이 감소했다.

평균 출퇴근 시간도 길어졌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국 평균 통근 및 통학 시간은 2010년 58.4분에서 2015년 61.8분으로 3.4분 증가했다. 특히 인천

(77.4분)과 서울(78.6분)이 각각 6.2분과 5.6분 늘었다. 수도권 평균도 4.6분 증가했다.

박철한 건설연 부연구위원은 "이미 우리나라 평균 통근 및 통학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고 평균보다 2배 길다"며 "도심 내 통행 흐름을 개선하는데 수송 및 교통 예산을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SOC 지원을 줄이면 SOC시설 예산을 더 큰 폭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2015년 중앙정부가 SOC 예산을 역대 최

대치인 26조1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지방정부 SOC 예산은 2014년(34조3000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34조4000억원에 그쳤다. 중앙정부가 체계적이고 일관된 목표를 제시하면서 SOC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공공 건설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방증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SOC 예산 감소는 지역균형 발전에 최대 악재"라며 "현재 SOC 예산 규모로도 통근시간 증가와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SOC 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7월 건설업 취업자 10만명 증가 그쳐... 전월 대비 32% 급감

시장 침체로 약세 불가피
일자리 확충 '빨간불' 켜져

매월 신규 취업자 수의 최대 40% 이상의 비중을 책임졌던 건설업 고용시장에 냉각기가 찾아왔다. '건설'을 배제한 일자리 추경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도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내놓은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1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만 3000명 증가했다.

통계청은 취업자 수가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월 24만3000명이었



던 취업자 증가 규모는 2월 37만1000명, 3월 46만6000명 등으로 크게 늘어났고 이후 4월부터 주춤했으나 꾸준히 30만명 이상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월 늘어난 취업자 수 중 적게

는 30%대 중반, 많게는 40% 이상을 차지했던 건설업의 고용사정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7월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1000명으로, 앞서 6월 증가분 14만9000명 대비 32% 넘게 줄었다. 지난 3~5월간 3개월 연속 16만명 이상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급락세에 접어든 셈이다. 때문에 지난 5월 사상 최초로 200만명 선을 넘어섰던 건설업 취업자 수도 2개월 만에 197만6000명으로 축소됐다.

통계청은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한 것은 지난해 유례없는 활황을 누렸던 고용 상황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일시적인 요인인 7월 늦은 장마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제약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건설업 고용 약화를 일시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그간 고용을 주도했던 부동산시장이 강도 높은 대책과 규제로 침체를 맞게 됐고, SOC 투자 축소 등 공공, 토목부문 수주 및 기성도 추가 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 국정 과제인 일자리 확충을 꼽고 연일 대책과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취업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설업 분야는 사실상 출세하고 있다"며 "과연 건설을 배제한 채 일자리 확충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봉승권기자 skbong@

SOC예산 쥐어짜기 내년에 더 심해진다

金부총리 “내년 물적투자 축소
11兆 이상 세출 구조조정 필요”
10년만에 최저수준인 SOC예산
요구액 18.7兆 방어도 어려울듯

내년도 SOC(사회기반 시설) 예산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SOC를 타깃 삼아 물적투자 축소를 통해 11조원+α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9일 “내년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에는)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선 “국정과제 외에 상당 규모의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약 9조4000억원의 세출구조조



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됐다”며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 정부 첫해 확실한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향후 국정과제 이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물적투자 축소의 대표적인 것으로 SOC를 꼽았다.

앞서 기재부가 접수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6% 증가한 총 424조5000억원 규모다. 이 중 SOC 요구액은 18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5%나 줄었다.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소 규모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물적투자를 축소하며 또 다시 ‘칼질’을 예고해 내년 SOC 예산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느 정도의 예산을 구조조정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SOC가 대표적인 물적투자인 만큼 각 부처 요구액 수준의 편성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봉승권기자 skbond@